‘5월의 증인’ 이광영씨 유품, 5·18기록관에 전시

청문회 증인 등 5·18 상징 인물 계엄군 총탄 맞아 한평생 후유증 유족, 총탄 혈흔 옷·파일 등 기증 전두환 사망한 날 숨진 채 발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기증된 고(故) 이광영씨(오른쪽·결혼식에서 사회를 보던 생전 모습) 의 유품과 자료에는 5·18 당시 계엄군이 이씨를 향해 쏜 총탄에 의해 구멍(흰색 점선 안)이 뚫린 재킷(왼쪽)과 평생을 모아온 자료·사진·문서(가운데)가 포함돼 있다. 〈독자 제공〉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와 2019년 광주지법의 ‘전두환 회고록’ 사자명예훼손 재판 등 5·18의 진실이 드러났던 고비마다 어김없이 등장했던 고(故) 이광영씨(사망 당시 68세).

계엄군 총탄을 맞아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한평생 ‘1980년 5월 광주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의 유품과 5·18 관련 자료들이 광주 금남로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전시된다. 유품 중에는 부상자를 구하다가 계엄군 총탄을 맞았던 흔적이 또렷한 당시 외투, 광주기독병원이 발급한 빛바랜 ‘척추손상 진단서’가 포함돼 있다.

13일 광주5·18기록관과 이씨 유족에 따르면 지난 12일 동생 광성씨가 이광영씨의 유품과 그가 평생 모아온 5·18 관련 자료를 5·18기록관에 기증했다. 구멍 뚫린 밝은 갈색 계열의 재킷, 문서·사진 등이 들어있는 파일 6권을 비롯해 사과 상자 한 상자 분량이다.

유족은 혈흔이 묻은 재킷을 한차례 세탁한 게 두고두고 아쉽다고 말했지만, 재킷 하단 허리 부분에는 총탄이 지나간 구멍이 또렷하다. 자료 중에는 5·18 직후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를 규합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하며 작성했던 문서 자료도 포함돼 있다고 유족은 전했다. 유족은 “고인께서는 생전에 모아둔 자료를 소중히 관리해왔다. 5·18 관련 자료가 기록관에 소장됐으면 좋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셔서 기증하게 됐다”고 말했다.

5·18기록관 측은 이광영씨의 자료를 일단 수장고로 옮긴 뒤 전시와 연구를 위한 분류작업을 준비 중이다.

고인은 1980년 5월 당시 승려 신분으로 석가탄신일 준비를 위해 광주를 찾았다. 5월 19일 대검을 장착한 총기를 메고 한 손에는 특별히 제작된 곤봉을 든 공수부대가 무고한 시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부상자들을 병원으로 옮기는 일을 도왔다. 남구 월산동을 지나다 계엄군 헬리콥터에서 쏜 총탄을 맞고 쓰러진 학생을 옮기기도 했다. 시민들을 돕던 당시 스물일곱의 그는 허리춤에 총탄을 맞았고 그 뒤로는 다시 걸을 수 없게 됐다. 이때 1급 장애인이 된 그는 여생을 휠체어에 의지해 살면서 트라우마에도 시달렸다.

악조건에서도 광영씨는 5·18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목소리를 높였다. 1982년 5·18부상자회 창립에 앞장서 초대 총무를 맡았다. 1985년에는 경찰이 망월묘역 참배를 막자 다른 부상자들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선두에서 경찰 제지선을 뚫었다. 1988년 국회 ‘광주청문회’에선 증인으로 나가 헬기 기총소사를 비롯한 전두환 계엄군의 만행을 세상에 알렸다. 30여 년 뒤인 2019년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재판에서도 거듭 헬기사격을 증언했다.

고인은 5·18 원흉인 전두환이 사망한 지난해 11월 23일 강진군 군동면 고향 마을 저수지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가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집을 나서기 전 침대 머리맡에 놓아둔 유서는 생전 그의 고통을 짐작게 한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에게’라는 제목의 A4 한 장짜리 유서에는 ‘최근 허리 통증이 심해져서 힘들고 괴롭다. 5·18에 대한 원한, 서운함을 모두 잊겠다. 가족에게 고맙다’고 적혀 있었다. 동생 광성씨는 “평생 부상 고통 속에 살아온 형님은 발포명령자도 나오지 않고, 책임자도 밝혀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날의 진실이 역사 속에 묻히고 있는 상황을 원통해 했다”면서 “형님의 유품 기증을 계기로 진실 규명이 속도를 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5살 조카 때려 숨지게 한 고모 첫 재판에서 학대 혐의 부인

다섯 살 조카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첫 공판기일이 지난 12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서 형사1부(김상규 지원장) 심리로 열렸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밤과 14일 오전 10시 30분께 장흥군 한 아파트에서 자신이 양육하던 조카 B양을 유리창 닦이 막대로 여러 차례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과 12월께 B양의 엉덩이를 때리거나 기합을 주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양은 2월 14일 몇 차례 구토를 한 뒤 집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다른 가족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오후 6시 22분께 사망했다.

A씨 측은 이날 재판에서 “아이를 때린 것은 사실이나 훈육 차원에서 이뤄진 체벌이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체벌하는 과정에서 조카가 숨질 것이라는 점은 예상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법률대리인인 한준엽 변호사는 “피해자가 구토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즉시 병원에 이송했어야 함에도 방치한 것은 내심 사망해도 좋다는 점을 용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B양 친모가 2주일이 지나서야 자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것을 두고도 A씨 측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1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장흥=김용기 기자 kykim@kwangju.co.kr

인근상인들 정몽규 회장 사과 촉구 책임있는 보상 협상 참여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 인근 상인들이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사과와 함께 책임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광주시와 서구를 향해서는 사고 현장 주변 상가 건물에 대한 안전진단 시행을 요구했다.

화정아이파크 피해대책위원회는 13일 붕괴사고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대책위는 “현대산업개발은 붕괴사고 후 정당한 보상논의조차 외면했다”며 “광주시와 서구는 현대산업개발을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고 사고 이후로는 비호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사가 시작된 후 상가 건물에 금이 가고, 지하에 물이 새는 등 문제가 심각해 서구에 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3년이 넘도록 묵살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와 서구는 안정화·철거 공사를 진행하기 앞서 사고 현장 주변 위험 상가들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을 시행하고, 보상합의를 마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책임자 11명 기소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서구청 공무원 계좌 추적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등 사고 책임자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장윤영)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주택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현장소장 등 6명을 구속기소하고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법인 3곳도 양벌규정에 따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현장 안전 관리 책임이 있는데도 하부층 동바리(지지대)를 설치하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되게 지시하거나 방치해 지난 1월 11일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등은 전문가 분석 등을 토대로 붕괴의 원인을 ▲구조 검토 없이 하중에 영향을 미치는 데크 플레이트 및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층 지지대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관리라고 판단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앞서 원청과 하청, 감리업체 관계자 등 15명과 법인 3곳을 검찰에 넘겼다.

한편 이 사건 관련해 경찰은 원청인 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와 복수의 광주 서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원청 대표이사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기준에 미지치 못한 품질관리원을 배치(업무상과실치사 등)해 결과적으로 붕괴 사고를 불러온 책임이 있다고 보고 있다. 대법원 판례 검토 등을 거친 결과, 품질관리원 인력배치 문서에 결재한 이들에 대한 책임 추궁이 가능하다고 보고, 대표이사 소환 시기를 저울질 중이다.

아울러 인근 주민들의 거듭된 민원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를 잡고 서구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인허가 과정에서 비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관련 공직자 소환조사와 함께 계좌 추적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형호 기자 khh@

‘광주 학동 사고’ 현대산업개발 영업정지 8개월 추가…총 1년4개월

광주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추가돼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됐다.

이와 별개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 행정처분도 6개월 내에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부실 시공’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린 데 이어 이번에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로 8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가로 결정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일 영등포구청이 현대산업개발의 하도급업체에 불법 재하도급을 이유로 영업정지 4개월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연합뉴스

지분쪼개기로 분양권 확보 지산1구역 지주 6명 기소

분양권 확보를 위해 이른바 ‘지분 쪼개기’를 한 혐의를 받는 광주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소유주들이 기소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지산1구역 재개발 사업지 내 지주 14명 중 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께 광주시 동구 지산 1구역 재개발사업 예정지 내 다가구주택으로 등록된 원룸을 사들인 뒤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으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등에서 더 유리하지만, 소유자가 1명이어서 재개발 시 분양권을 1개만 받을 수 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해 세대별로 분양권을 확보할 수 있다.

적발된 14명 중에는 17명의 사상자를 발생한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의 조합장과 아들·딸, 동구청 건축과 공무원,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됐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에서 열린다. /김형호 기자 khh@

회사 사정상 “정리” 합니다. 문의 010-3605-5000

1. 해광, 샹그릴라 APT
- 선암동, 공105㎡ 전82㎡
- 10층, 101동, 남향, 조망 좋음
- 즉시 입주가.
- 매매 – 4억 5000만원 (일시불 조정가)

2. 신안동, 상업용지
- 대지582㎡, 알반 상업 지역
- 오피스텔 허가 득, 최고요지
- 매매 – 21억

3. 대인동, 상업용지
- 대지515㎡, 알반 상업 지역
- 롯데백화점 부근
- 매매 – 19억

4. 오피스텔, 급매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계 108㎡, 전 67㎡
- 내부깨끗, 창가쪽, 전망 좋음
- 매매 – 1억 1000만원 (토지와 교환가능)